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1월 26일 (목)

CONTENTS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슈브리프

(IB 2020-14)

CONTENTS

I.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1

II.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3

III.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 23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행일: 2020년 11월 26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11월 4째주)는 바이든 외교안보정책, 스타트업 해외사례, 배달라이더업계 실태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전망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중국·대북정책, 동맹관 등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분석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주요국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분석, 국내 스타트업 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업계 실태를 진단, 보호정책 마련 등 업계 건의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제1편: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

세계 석학들의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대중 압박전략”이 될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 3C(△Cooperation: 협력, △Competition: 경쟁, △Confrontation: 대치) 정책이 혼합된 ‘선택적 대결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 신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다른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바이든 신정부도 지속적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

제2편: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정부 지원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 반면, 주요국들은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실패를 용인하는 ‘다브카’ 문화,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음.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등이 창업환경개선과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 인센티브 다각화, 세금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제3편: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 확산으로 외식업과 음식배달업의 성장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열악한 처우와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고용형태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전반의 미비로 인해 유상운송보험 역시 가입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적극적 보호 정책이 필요함

II.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작성: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jky9618@hanmail.net)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정부 지원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 반면, 주요국들은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실패를 용인하는 ‘다브카’ 문화,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음.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등이 창업환경개선과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 인센티브 다각화, 세금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1. 논의의 배경

-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스타트업 투자는 여전히 민간보다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은 민간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진작 정책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전개
 - 최근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스타트업 증가로 전 세계 투자금액 중 아시아 투자 비중이 (2012년) 11.5% → (2018년) 39.1%로 증가
 - 유럽은 EU 차원에서 스타트업 보조금,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개별 국가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
- 스타트업 활성화는 국내 기술력, 아이디어,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바, 본고는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① 아시아

① 중국

- 2014년 9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대중창업을 장려하는 ‘대중창업, 만민혁신’ 강조하며 시작
 - 창업을 위한 각종 서류를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통일한 ‘다중합일’ 제도 통해 행정규제를 축소 및 철폐
 - 창업자금 조달 돕기위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시장인 ‘신삼판’을 2013년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청년층 중심의 창업지원 플랫폼 ‘중창 공간’도 전국적으로 확대
 -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창업에 성공한 모델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
- 개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70% 세제혜택 제공
- 벤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기간을 일컫는 ‘엑시트(Exit) 기간’이 4년으로 미국의 7년보다 더 짧음

② 싱가포르

- 돈·인재·네트워크 삼박자를 고루 갖춘 나라
 - 2008년 ‘혁신과 기업을 위한 기초사업’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금융 및 MICE 산업에 스타트업이 가세
 - ※ MICE 산업: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네 분야를 일컫는 서비스 산업

- 금융 선진국답게 초기에는 스타트업 자금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에 역점. 이스라엘과 실리콘밸리의 벤처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1:1매칭 펀드 실시
- 정부의 다양한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 추진
 - 스타트업에 투자할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Early Stage Venture Fund’를 설립, RIE2020(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 2020) 계획을 발표하며 4년에 걸쳐 연구개발 투자에 190억 싱가포르 달러 투입
 - 아이디어만 있는 신생 기업 돕기 위해 스타트업SG를 설립해 멘토링, 대출, 펀딩, 컨설팅을 돕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
 - 세금면제제도를 통해 신규 기업 설립 장려
- 정부의 일관된 규제정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촉진
 - 혁신 스타트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불확실성이 적으며 한번 정한 정책은 꾸준히 유지함.
 - 드론 관련 정책이 대표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때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추진

③ 인도

- 젊은이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더 좋아하는 나라로 △연 5% 이상 성장, △13억 5000만 인구의 풍부한 내수시장, △30대 이하 젊은 층이 50% 이상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 시설과 일자리는 부족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기술 분야 경쟁력이 높으며, 미 실리콘밸리에 비해 인건비가 4배나 싼데도 우수한 엔지니어 등 인적자원이 풍부
- 2014년 모디 총리가 독립 69주년 기념일에 언급한 ‘스타트업 인디아’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을 집중육성,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

- 젊은이들에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디아’를 적극 홍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불완전한 R&D 환경, 세제 등 복잡한 규제 완화에 초점
 - 3년간 법인세 면제, 특허등록세 80%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정부 간 스타트업 지원 경쟁체제 도입
- 모디의 ‘스타트업 인디아’ 구상 덕에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전개, 현재 인도는 가장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으며 2030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2] 서유럽

① 프랑스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온 스타트업 육성정책
 -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우파 정권이었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대출이 없으면 사회보장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실직자, 학생, 퇴직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며 창업을 유도
 - 이어 집권한 좌파정권 올랑드 정부도 ‘라 프렌치 테크’ 제도를 선보이며 이전 정권의 ‘마이크로 기업제도’를 확대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현 마크롱 정부는 실업자가 창업을 하면 수익이 날 때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프랑스 전역에 직원 10인 이하, 연매출 200만 유로 이하인 ‘마이크로 기업’ 100만개 이상 탄생
-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49%가 “마이크로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35세 미만 창업 비율이 57%에 달하는 등 청년창업이 활성화

② 영국

- 금융위기 이후 런던 빈민지역을 영국판 실리콘밸리 ‘테크시티(Tech City)’로 만들면서 스타트업 육성정책 시작
 - 런던 도심과 불과 10분 거리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빈민지역에 창업자들이 모여든 것을 영국정부가 주목, 이후 2010년 캐머런 총리가 ‘테크시티 조성안’을 발표
- 2011년 출범 당시 약 100개였던 입주기업이 최근에는 5,000여개가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뚜렷
 - 테크시티는 구글·아마존·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수천개의 스타트업이 모이는 지역으로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알파고(AI)를 만든 스타트업 기업 ‘딥마인드’(DeepMind)도 이곳에서 탄생
- 테크시티가 명실상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창업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업 절차 간소화’, △무일푼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자본금 제한 철폐’, △‘자유로운 설립과 폐업’ 등이 원동력 등

③ 북유럽

① 스웨덴

- 인구 1,000만 명에 연간 창업기업 수가 7만여 개에 달하는 나라
 - 선진화된 복지제도가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 창업에 실패해도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어 창업의 증폭제 역할
 - 발명자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 근무 허용 및 대학 창업이 용이

- 특히, 창업 초기부터 내수보다 글로벌시장을 공략해 볼보, 이케아, H&M 등 세계적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
 - 1990년 이전 공기업들의 시장독점으로 규제가 심했으나, 각종 규제 완화로 신생기업이 기존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쉬운 환경 조성
 - 외국 기업들도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할 수 있게 함
- 법인세도 (1991년) 30% → (2020년) 22%로 낮춰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였고, 2000년에는 상속세 및 부유세를 없애 여유자금이 있는 부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덴마크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년 사이에 3,500여개 이상 기업이 도산, 정부는 3년간 매출 또는 근로자 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한 '성장형 기업'에 집중 지원
 -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 대학 8곳이 모두 국립대라는 점을 활용해 대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 대학 연구 성과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 토양 조성
- 든든한 복지제도 및 유연한 노동시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
 - 고용주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지만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기 쉬움
 - 진로 변경 등 자발적 실업도 많으며, 1년에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옮길 만큼 이직도 잦음

-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적고 학력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도 한 몫
 - 높은 소득세율로 소득이 많은 직종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작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학진학률이 40% 정도
 - 기술직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과정 실습으로만 진행되는 기술학교로 진학,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는 풍토

4] 미국, 이스라엘

① 미국

- 미국은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세계 1위의 스타트업 천국
-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국'을 신설해 규제·절차 개선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벤처캐피털 투자가 2013년 36.4억 달러에서 2018년 99.5억 달러로 173.4% 증가
- 글로벌 IT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영리단체 통해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 2012~2016년, 미국 5대 IT기업 구글, MS, IBM, 애플, 아마존이 스타트업 420개에 투자. 특히, 구글은 79.3%인 333개 기업에 투자해 우버 등 22개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

② 이스라엘

- 실패를 용인하고 존중하는 '다브카(Davca)' 문화를 스타트업 창업에 적용, 이스라엘은 '종교성지'에서 '창업성지'로 떠오르고 있음

- ※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다브카는 “실패해도 괜찮으니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라”는 뜻으로 청년들은 도전하고, 책임은 사회가 진다는 것
- 이스라엘은 창업을 개인의 영리 추구보다는 공공 발전의 성격으로 인식,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음
- 창업지원으로 생겨나는 스타트업은 매년 1,000개로 이 중 2%만 성공. 정부, 요즈마펀드 등은 실패한 98%의 창업자 지원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실패하기 전보다 20% 이상의 추가 지원을 제공
-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
 - ※ 요즈마펀드(Yozma Fund): 벤처캐피탈 자금 공급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40%)와 민간(60%)이 공동 출범한 펀드로 1993년 출범, 이후 민간으로 최종 이관
- 한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빨리 키워서 적당한 가격에 팔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방식의 ‘연쇄창업’을 활성화
- 주로 첫 번째 사업에서 경험을 쌓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에 올인
-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약 4년 반으로 엑시트 기간 비교적 짧음
- 빠른 엑시트는 결국 활발한 재창업으로 이어져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 견고한 투자 생태계 성장기반이 조성.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엑시트까지 보통 약 10년 소요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주요국 스타트업 지원전략 요약

- 전 세계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의 방안으로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에 집중
 - (규제완화) △창업절차 온라인화 등 행정간소화, △자본금 제한 철폐 (영국), △무인자동차 관련 법 제정(싱가포르) 등
 - (금융지원) △해당 기업에 지원한 민간자본에 매칭해 투자(미국), △기금 조성해 VC에 지원(중국), △EU 및 역내국가의 기금을 통한 지원(EU) 등
 - (세제혜택) △스타트업 투자한 주식 5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세 영구면제(미국), △낮은 법인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면제(EU), △개인투자자 투자액의 70% 세금면제(중국) 등
 - 특히, 미국과 중국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창업환경 개선과 멘토링에, EU와 같이 민간투자가 부족한 경우 정부의 정책 자금지원에 중점을 둬

② 정책적 시사점

- 스타트업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 (중국) 알리바바 마윈이 창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 (이스라엘) 실패 경험을 재창업의 기회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다브카

(Davca)' 문화 도입, 창업 실패 후 재창업시 추가적인 지원

- (덴마크) 기업가정신 확산을 국가전략으로 추진
- (프랑스) 창업 수익 발생 시까지 실업수당 지급

○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위해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민간자본 투자 유인방식 다각화 필요
- VC 및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금액 정부 투자하는 매칭 지원
- 스타트업 투자자 대상 세금감면,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금감면 혜택 강화

○ 정부정책 자금지원보다 국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 절실

- 글로벌VC를 통한 투자유치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켓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10년 걸리는 엑시트 기간을 단축하고 재창업 함으로써 성공 창업 경험의 선순환 유도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